



2024.9.23.

국회미래연구원 | 국가미래전략 Insight | 107호

정치 양극화의 실태와 개선방안



박현석(거버넌스그룹장)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ISSN

2733-8258

발행일

2024년 9월 23일

발행처

국회미래연구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786-2190 Fax 02-786-3977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단기 심층연구결과물로,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합니다.

Contents

01	02	02	03
한국의 정치 양극화, 얼마나 심각한가		국회미래연구원의 유권자 정치인식 조사	
03	08	04	13
정당의 이념적 양극화와 유권자의 정서적 양극화		정치 양극화 완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하나	



요약

■ 한국의 정치양극화 실태

- 정당 간의 이념적 거리가 멀어지고, 국회의원의 이념적 양극화 확대됨
- 정당 활동가와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상대 정당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갖는 감정적 양극화의 징후 등장
- 일반 시민의 이념적 양극화의 징후는 발견하기 어려우며 정서적 양극화는 심각하다고 할 수 없으나, 대통령, 국회 등 정치 행위자들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은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임

■ 정당 양극화와 유권자의 정서적 양극화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설문실험 결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등 정당 정보에 따라서 정치인에 대한 유권자의 감정적 호감도가 바뀐다는 경험적 근거를 찾을 수 없었음

-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점규제에 대해 진보적 정책을 내건 후보자 A와 보수적 정책을 제시한 후보자 B에 대한 유권자들의 호감도를 측정한 설문실험 결과, 후보자의 정당 정보가 제시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할 때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 정당의 이념성향 차이가 유권자의 감정 양극화로 이어지지 않았음
- 정치 양극화는 정당과 정치인, 강성 지지층 등 정치 고관여층이 주도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음

■ 정치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개선방안

- 기존의 균열구조를 재편성할 수 있는 정책의제 제시: 영남-보수, 호남- 진보 등 지역 정체성과 이념 정체성이 중첩되면서 정당 정렬 및 감정적 양극화가 심화되므로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 / 연금 개혁과 세대 간 갈등 등 기존의 균열구조와 교차하는 새로운 균열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중장기 정책의제 적극 발굴해야
- 정확한 정보 전달 및 팩트체크, 검증 등 강화: 집단 간 적대감은 다른 집단의 속성과 구성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므로 가짜뉴스 혹은 허위 및 기만 정보의 확산 억제 및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양극화 완화 가능
- 정당의 의사결정 구조 및 공천제도 개혁: 양당제가 유지되는 경우 다양한 의견이 대표되기 위해서는 당내에 다양한 파벌과 세력이 공존하는 정당 민주주의의 필요. 당내 다원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적 공천제도를 분권화된 공천제도로 전환해야 함

* 이 보고서는 연구보고서 23-12호(박현석, 박상훈 윤광일, 이재목, 2023)의 연구결과의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하였다.

01

한국의 정치 양극화, 얼마나 심각한가

- 정치인, 정당 활동가 등 직업 정치인과 정치 고관여층의 이념적 양극화 심각(박현석 외, 2023: 14-20)
 - 법안 표결 결과로 보면 양대 정당의 이념적 거리가 멀어짐
 - 스스로 평가한 이념성향에 따르면 각 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중도의 비율이 낮아지고, 양극단에 위치한 지지자의 비율이 높아짐
 - 유권자 차원에서는 스스로 평가한 이념성향에 따르면 이념적 양극화의 뚜렷한 징후를 발견하기 어려움
 - 정당 활동가와 지지자의 선호가 유권자 평균에서 멀어지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관찰됨
 - 정당 활동가와 지지자를 중심으로 양당에 대한 호감도 차이가 벌어지는 정서적 양극화 심화됨

- 선행 연구들은 유권자 차원의 이념적 양극화는 심각하다고 하기 어려우나, 상대 정당과 지지자들에 대한 불신 및 부정적 인식이 나타나는 등 정서적 양극화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함(김기동·이재묵 2021, 2022; 이내영 2022; 장승진·하상응 2022)

- 우리는 유권자의 정치 양극화가 정당과 정치인의 양극화의 영향을 받아 확대 심화되는지 분석하기 위해 설문실험을 실시하였음
 - 기존의 연구들은 유권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권자의 정치 양극화와 정치 엘리트의 정치 양극화의 연관성을 가설 차원에서 다뤄왔음
 - 우리는 정당의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치인의 소속 정당 정보와 정책 선호가 주어졌을 때 정당에 관한 정보가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기 위해 설문 실험을 실시하였음
 - 정당과 정치인의 양극화가 유권자들의 정서적 양극화를 동원하며, 양극화된 유권자들이 소속 정당에 따라 정치인에 대한 호감도를 형성한다는 가설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찾을 수 없었음

02

국회미래연구원의 유권자 정치인식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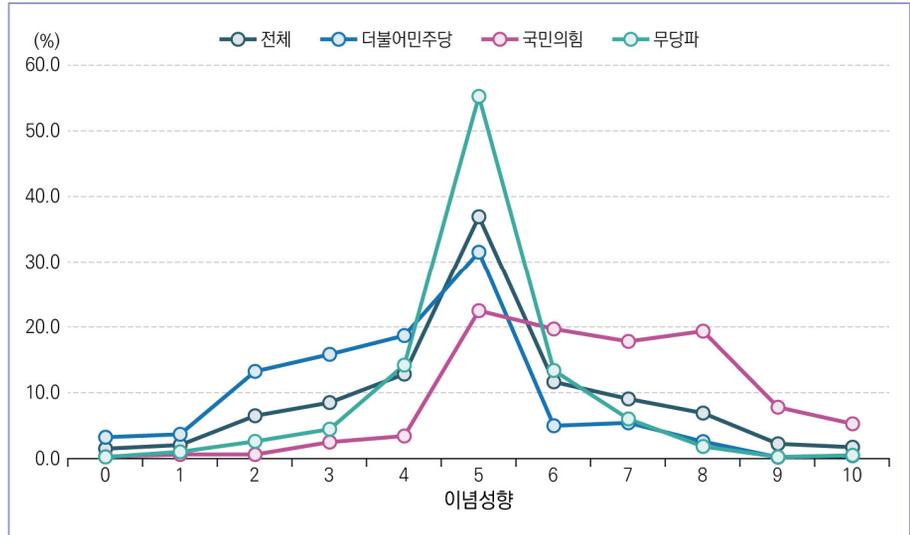
■ 2023년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1200명의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표 1 응답자의 특성(명)

성별						
남자			여자			
608 (50.7%)			592 (49.3%)			
연령						
만18~29세 (18.8%)	30~39세 (17.4%)	40~49세 (21.2%)	50~59세 (22.8%)	60~69세 (19.8%)		
선호정당						
더불어민주당 460 (38.3%)	국민의힘 320 (26.7%)		정의당 40 (3.3%)	그 외 380 (31.7%)		
거주지역 소재지						
서울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인천/경기	광주/전북/전남	대전/세종/ 충북/충남	강원/제주
228	176	111	393	115	130	47
소득수준						
평균보다 낮다 (513)		평균 비슷 (499)			평균보다 높다 (188)	

- 응답자들이 스스로 평가한 이념성향에서는 선행 연구들과 일관되게 양극화 징후를 확인하기 어려움
 - 평균 점수로 보면 전체 응답자 평균은 5.03이며,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4.05, 국민의힘 지지자는 6.57, 무당파는 4.98로 나타났음
 - 양대 정당 지지자들의 이념성향 평균값은 차이가 적지 않으나, 분포를 살펴보면 유권자들 심각한 이념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기 어려움(그림 1)
 -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중 중도를 선택한 이들이 31.5%였으며, 국민의힘은 22.5%로 나타남

그림 1 응답자들이 스스로
평가한 이념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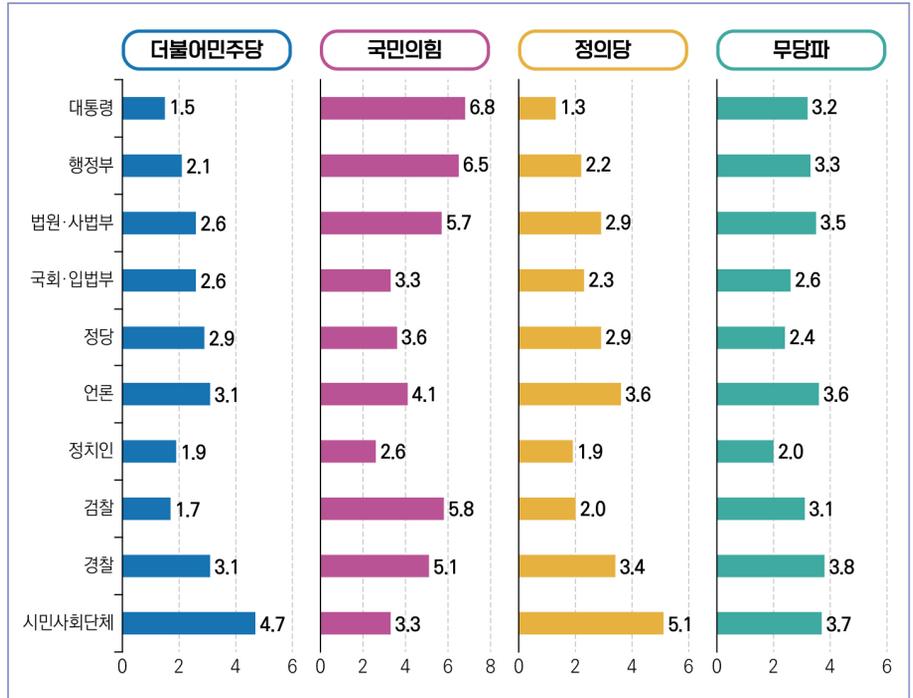


※ 0: 매우 진보, 5: 중도, 10: 매우 보수

■ 이념 양극화는 심각하지 않으나 양대 정당 지지자들은 정치 상황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확연한 차이를 보임

-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대한 평균치를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1.52,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17, 정의당 지지자들은 2.98, 무당파는 3.42로 양대 정당 지지자들 사이의 인식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남
-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의 절반 이상이 대통령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하는 등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이념적으로 볼 때 대통령과 더 멀다고 볼 수 있는 정의당 지지자들과 비교해도 민주당 지지자들의 신뢰도가 확연히 낮게 나타남
- 법원에 대한 신뢰도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2.48,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5.35, 정의당 지지자들은 3.65, 무당파는 3.63으로 나타나는 등 양대 지지자들 사이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남
- 대통령 신뢰도와 유사하게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의 법원에 대한 신뢰도 평균값이 정의당 지지자들의 평균값에 비해서도 낮았음

그림 2 지지 정당별 사회 기관 신뢰(0-10)의 평균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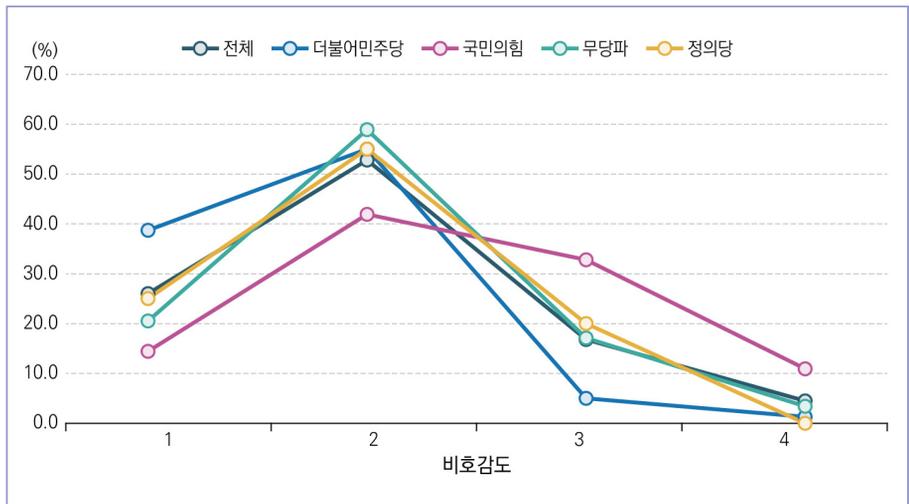


※ 0: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5: 보통이다. 10: 매우 신뢰한다.

- 대통령은 정당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당파적 인식이 자연스러우나,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지지 정당에 따라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것은 심각하다고 판단됨
- 국회에 대한 신뢰도의 평균값은 더불어민주당은 2.61, 국민의힘은 3.22, 정의당은 2.75, 무당파는 2.80으로 대통령과 법원에 대한 신뢰도와 달리 정당간 차이가 크지 않았고, 무당파 응답자들도 유사한 양상을 보임
- 흥미로운 점은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다수당으로서 국회 운영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의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과반을 점유하지 못한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국회에 대한 신뢰도 평균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의 신뢰도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남
-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제도권 기관에 대해 낮은 신뢰를 보였지만 시민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음.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신뢰도 평균은 더불어민주당 4.53, 국민의힘 3.39, 정의당 4.63, 무당파 3.96였음

- 상대당 지지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나타나고 있으나 정서적 양극화의 수준이 심각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응답자들에게 다른 정당 지지자들과 직장동료, 이웃, 절친한 친구,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에 대해 질문하였음
 -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과 직장 동료로 지내는 것을 상대적으로 불편해 하였지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응답한 평균값은 2.4로 '별로 불편하지 않다'와 '대체로 불편하다'의 사이로 최솟값 1과 최댓값 4의 중간값과 차이가 거의 없었음¹⁾
 -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직장 동료로 지내는 것을 상대적으로 불편해 하였지만,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응답한 평균값도 2.58로 중간값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양당 지지자들 모두 상대 정당 지지자들과 직장 동료로 지내는 것에 대해 '별로 불편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40% 이상으로 가장 빈도가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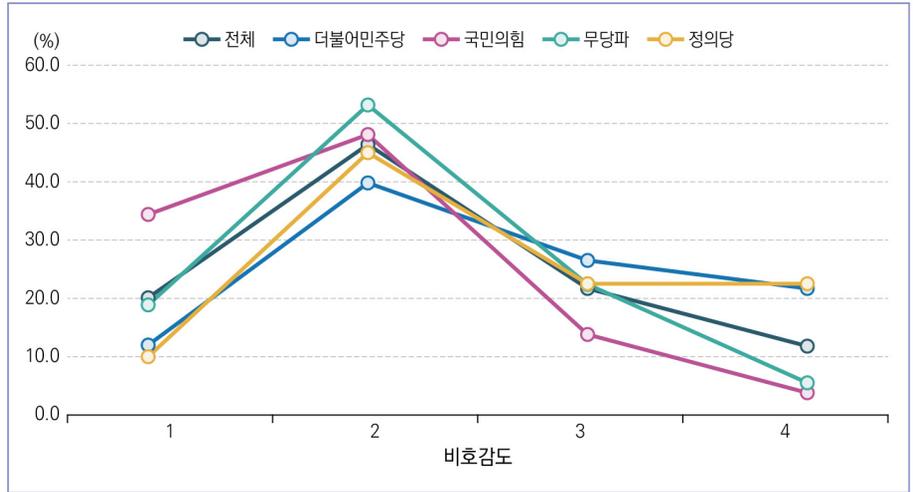
그림 3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과 직장 동료 지내는 것



※ 1: 전혀 불편하지 않다. 2: 별로 불편하지 않다. 3: 대체로 불편하다. 4: 매우 불편하다.

1) <그림 3>의 하단에 기술된 것처럼 최솟값이 1이고 최댓값이 4이므로 평균값이 정중앙에 위치한다면 2.5이다.

그림 4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직장 동료로 지내는 것



※ 1: 전혀 불편하지 않다. 2: 별로 불편하지 않다. 3: 대체로 불편하다. 4: 매우 불편하다.

- 종합해 보면 유권자들의 이념적 양극화, 정서적 양극화는 심각하다고 볼 수 없으나, 정치 인식의 차이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이념성향 분포로 보면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일관되게 유권자의 이념적 양극화 징후를 발견하기 어려움
 - 우려하였던 상대 정당 지지자들에 대한 정서적 양극화도 징후가 있으나 심각하다고 볼 근거는 빈약함
 - 반면 정치 행위자와 국가기관, 그리고 시민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살펴보면 지지 정당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는 등 정치 행위자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은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양극화되어 있음

03

정당의 이념적 양극화와 유권자의 정서적 양극화

- 정당과 정치인은 양분된 유권자들의 상대 진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자극하여 지지를 확보하는가? 정당과 정치인의 양극화된 대립구도는 유권자들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가?
 - 정당 일체감이 높고 지지 정당의 중요성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할수록 정서적 양극화 경향을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정당과 정치인의 양극화와 유권자의 정서적 양극화의 관계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우리는 정당의 이념적 양극화와 정당 단서가 유권자의 감정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앞서 분석한 설문조사와 병행하여 온라인 설문 실험 실시
 - 선행 실험연구에 따르면 정당 정보가 주어졌을 때 정치 엘리트의 이념적 양극화가 유권자들의 정서적 양극화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남(권구선 2022)
 - 위 연구는 가상의 후보자들의 이념성향 수치를 제시하고 소속 정당 정보가 주어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를 측정하여 비교함
 - 우리는 이념성향 수치 대신 구체적 정책이슈를 선정하여 응답자들에게 가상의 후보자들의 정책 선호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후보자들의 소속 정당에 대한 정보가 주어질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응답자들의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가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았음

- 설문실험의 구조
 - 총 1,200명의 온라인 설문실험 참가자들을 성별, 거주지역, 지지정당 분포가 유사하도록 4개의 그룹으로 무선 할당하였음²⁾

2) 무선 배치 후 집단별 성, 나이, 교육수준, 월평균 가구소득, 거주 지역 분포의 의미있는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실험처치 지문 이외에는 집단이 동질적이라는 실험설계의 가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사항은 박현석 외(2023)의 65-6쪽 <표 2-8>을 참조할 것.

표 2 비교 그룹 별로 제공되는 정보

		후보자의 소속정당 정보	
		무	유
후보자의 정책선호 차이	적음	그룹 1 300명	그룹2 300명
	큼	그룹3 300명	그룹4 300명

- 실험 설문에서 정당 단서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유권자들에게 친숙하면서도 현재로서는 정치화의 수준이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점 규제를 쟁점이 되는 정책 이슈로 선택하고, 아래와 같은 설문실험 지문을 제시함³⁾

그룹1(300명). 정당 단서 없음/후보자간 차이 적음

- 쿠팡,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의 경제·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관련 업체들이 막강한 영향력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구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 A와 B는 이 사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입장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후보자 A: “정부는 플랫폼 기업들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경영진과 플랫폼 노동자와의 사회적 대화를 촉진시켜 지배적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개선해야 한다.”

후보자 B: “플랫폼 경제가 이제 성장하기 시작했으므로 규제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 플랫폼 기업들의 자율규제를 활성화하고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명백한 시장교란 행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규제를 도입할 수 있다.”

그룹2(300명). 정당 단서 있음/후보자간 차이 적음

- 쿠팡,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의 경제·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관련 업체들이 막강한 영향력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 후보자 A와 국민의힘 소속의 국회의원 후보자 B는 이 사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입장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후보자 A: “정부는 플랫폼 기업들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경영진과 플랫폼 노동자와의 사회적 대화를 촉진시켜 지배적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개선해야 한다.”

후보자 B: “플랫폼 경제가 이제 성장하기 시작했으므로 규제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 플랫폼 기업들의 자율규제를 활성화하고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명백한 시장교란 행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규제를 도입할 수 있다.”

3) 참여자에게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라는 개념이 생소하거나 어려울 가능성이 있으므로 쿠팡, 네이버, 카카오 등 널리 알려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예를 제시했고, 같은 지역구가 아닌 다른 지역구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를 평가하게 하여, 참여자가 투표하는 지역구의 실제 두 당의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그룹3(300명). 정당 단서 없음/후보자간 차이 큼

- 쿠팡,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의 경제·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관련 업체들이 막강한 영향력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구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 A와 B는 이 사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입장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후보자 A: “정부는 플랫폼 기업들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적극 대응해야 한다.”

후보자 B: “온라인 플랫폼은 미래의 성장동력이므로 시장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 성장을 촉진해야 하며, 현재 존재하는 규제도 적극적으로 철폐해야 한다.”

그룹4(300명). 정당 단서 있음/후보자간 차이 큼

- 쿠팡,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의 경제·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관련 업체들이 막강한 영향력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자 A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후보자 B는 이 사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입장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후보자 A: “정부는 플랫폼 기업들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적극 대응해야 한다.”

후보자 B: “온라인 플랫폼은 미래의 성장동력이므로 시장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 성장을 촉진해야하며, 현재 존재하는 규제도 적극적으로 철폐해야 한다.”

- 그룹1의 지문은 두 후보자가 독점 규제 쟁점에 대해 진보와 보수의 입장에서 온건한 견해를 보이며, 소속 정당 정보를 제시하지 않았고, 그룹2의 경우 그룹1의 지문과 같은 내용이지만 후보자 A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 B는 국민의힘 소속임을 밝혔음
- 그룹3의 지문은 정당 단서 없이 두 후보자가 쟁점에 대한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룹4는 같은 내용이지만 후보자 A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 B는 국민의힘 소속임이라는 정당 단서를 제시함
- 참여자는 그룹별로 다른 지문을 읽고 서로 다른 지역구에 출마한 가상의 두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를 선택함(0: 매우 부정적, 5: 보통, 10: 매우 호의적)

■ 실험 결과

- 그룹별로 후보자 A와 B에 대한 호감도의 평균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교 그룹 간의 동질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됨
- 표본에서 상대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의 숫자가 많았으므로 둘 중 진보적인 후보자 A의 호감도가 다소 높게 나타남

표 3 집단별 후보 호감도

후보자 A	평균	표준편차	n	후보자 B	평균	표준편차	n
그룹 1	6.20	2.27	300	그룹 1	5.45	2.24	300
그룹 2	5.91	2.36	300	그룹 2	5.26	2.24	300
그룹 3	5.93	2.24	300	그룹 3	5.29	2.29	300
그룹 4	6.01	2.38	300	그룹 4	5.23	2.34	300
전체	6.01	2.31	1,200	전체	5.31	2.27	1,200

-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룹1(정당정보 없음, 후보자 차이 적음)과 그룹2(정당정보 있음, 후보자 차이 적음), 그리고 그룹3(정당정보 없음, 후보자 차이 큼)과 그룹4(정당정보 있음, 후보자 차이 큼)를 비교해 볼 때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도 평균의 차이가 크지 않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점을 확인할 수 없었음⁴⁾
- 흥미롭게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정당 정보가 주어지지 않고, 쟁점 양극화의 수준이 낮았던 그룹 1에서 후보자 A와 B 모두 호감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소속 정당 정보의 영향력은 정책 이슈가 결부될 경우 제한적이며 쟁점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주장하는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가 높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
-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을 따로 분류하여 살펴봐도 후보자의 소속 정당 정보가 호감도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는 경험적 근거를 찾을 수 없었음. <표 4>의 그룹별 호감도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⁵⁾
-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의 경우 후보자간 차이가 크지 않은 온건한 정책을 제시한 경우 정당 정보가 없는 중도 진보적 후보(후보자A)에 대한 호감도 평균(그룹1)이 정당 정보가 제시된 경우(그룹2)보다 높았으며, 후보자B의 경우도 동일한 결과를 보임

표 4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후보 호감도

후보자 A	평균	표준편차	n	후보자 B	평균	표준편차	n
그룹 1	6.88	2.16	107	그룹 1	5.05	2.25	107
그룹 2	6.41	2.31	95	그룹 2	4.67	2.25	95
그룹 3	6.40	2.27	85	그룹 3	4.91	2.40	85
그룹 4	6.65	2.22	94	그룹 4	4.77	2.51	94
전체	6.60	2.24	381	전체	4.85	2.34	381

-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따로 분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후보자의 소속 정당 정보가 호감도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는 경험적 근거를 찾을 수 없었음. <표 5>의 그룹별 호감도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⁶⁾

4) 통계적 검증결과는 박현석 외(2023)의 67~9쪽을 참조할 것.
 5) 박현석 외(2023)의 69~70쪽 참조.
 6) 박현석 외(2023)의 70~71쪽 참조.

표 5 국민의힘 지지자의 후보 호감도

후보자 A	평균	표준편차	n	후보자 B	평균	표준편차	n
그룹 1	5.53	2.49	64	그룹 1	6.27	2.55	64
그룹 2	4.83	2.7	66	그룹 2	6.45	2.19	66
그룹 3	5.52	2.67	64	그룹 3	5.58	2.79	64
그룹 4	5.45	2.53	56	그룹 4	6.13	2.38	56
전체	5.32	2.60	250	전체	6.11	2.50	250

- 무당파 응답자들의 경우, 지지정당이 없는 관계로 후보자 간 호감도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정당 지지자들과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찾을 수 없었음.⁷⁾ 다시 말해 정당 정보가 호감도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음

표 6 무당파 응답자들의 후보자 간 호감도 차이(후보자A-후보자B)

전체	평균	표준편차	n	무당파	평균	표준편차	n
그룹 1	0.75	3.85	300	그룹 1	0.67	3.47	92
그룹 2	0.65	4.01	300	그룹 2	0.81	3.6	106
그룹 3	0.64	3.92	300	그룹 3	0.69	3.22	99
그룹 4	0.78	4.07	300	그룹 4	0.51	3.47	110
전체	0.70	3.96	1,200	전체	0.67	3.43	407

- 설문실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예상과 달리 적어도 정치적으로 심각한 공방이 일어나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는 유권자 차원에서는 정당 정보에 의한 감정 양극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음
 - 후보자 사이의 정책입장 차이의 정도와 정당 단서 유무로 구분된 4개 집단에서, 어느 조건에서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감정 양극화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음. 특히 후보자 간 입장 차이가 크고 정당 단서도 있는 조건에서도 유권자들의 감정 양극화는 나타나지 않았음
 - 이와 같은 결과는 정당 단서가 감정 양극화로 이어진다는 최근 실험연구(권구선 2022)와 대조되며, 미국의 실험연구들의 결과와도 배치됨. 하지만 유사한 실험연구에서 이념적 양극화가 감정 양극화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결과(권구선 2022)와는 일관되는 것으로 판단됨

7) 박현석 외(2023)의 72~73쪽 참조.

04

정치 양극화 완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 조사 및 실험결과를 종합하면 정치 양극화의 기원은 정치 엘리트와 정당 활동가 및 강성 지지자 등 정치 고관여층에 있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음
 - 유권자 차원의 이념 양극화가 진행되었다는 근거는 희박함
 - 정서적 양극화의 징후가 있으나 심각하다고 볼 근거 빈약함
 - 유권자들의 정치인에 대한 감정적 호감도가 정당 양극화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고 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음

- 정치 양극화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치 고관여층이 정당 내부에서 과대대표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유권자들의 다양한 선호가 정치권에서 대표되고 경쟁할 수 있는 정치 여건을 마련해야 함
 - 기존의 연구들은 승자독식형 정치제도의 전환,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도입, 지역정당 허용과 정당의 분권화 등 제도개혁에 초점을 둠(박현석 2023)
 - 우리는 개헌 및 선거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뤄진 행위자 차원의 대안들 제시

- 첫째, 호남-진보, 영남-보수 등 지역 정체성과 이념 정체성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기존의 균열구조를 재편성할 수 있는 정책 의제들을 적극적으로 제시
 - 예를 들어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역소멸 문제, 세대간 선호가 엇갈리는 연금개혁 문제 등은 영남과 호남, 진보와 보수의 대립구도를 넘어설 수 있는 중요한 중장기 정책의제를 발굴하여야 함
 - 설문실험 결과는 유권자들이 정치 양극화의 대립 구도 속에 휘말리지 않고 정당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다면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

- 둘째, 정확한 정보 전달 및 팩트체크, 검증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집단 간 적대감은 대체로 다른 집단의 속성과 구성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므로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전달을 통해 양극화 완화 가능

- 가짜뉴스 또는 허위 및 기만 정보의 확산을 막는 대안으로 제시된 팩트체크도 정치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셋째, 기존의 제도개혁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져 온 정당의 의사결정 구조 및 공천제도 개선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개헌 혹은 선거제도의 변화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현행 양당 중심의 정치가 지속된다면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커짐
 - 정당 개혁의 초점은 강성 지지자들의 견해가 과대 대표되고 중도적 성향의 당원들과 일반 유권자들의 선호가 상대적으로 대표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는 데에 두어야 함
 - 다당제가 도입되면 정당 내부의 다양성이 낮아지더라도 정당의 다양성이 확대될 수 있지만 양당제가 지속된다면 다양한 당원들의 선호가 대표될 수 있도록 정당 내부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
 - 중앙집중적인 공천제도를 분권화하고 개별 국회의원들의 자율성을 높여서 정당 내부에 다양한 정책 파벌이 공존하며 이념적으로 경쟁하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음.
 - 분권화된 상향식 공천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분권화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당 지도부 중심의 획일화된 당론정치는 극복할 가능성이 높아짐

참고문헌

- 권구선(2022) 정치 엘리트들의 이념적 양극화와 유권자들의 정서적 양극화: 설문 실험 연구. 사회과학연구 48(1): 73-95.
- 김기동·이재묵(2021) 한국 유권자의 당파적 정체성과 정서적 양극화. 한국정치학회보 55(2), 57-87.
- _____ (2022) 당파적 정체성, 연령, 그리고 정서적 양극화. 정치정보연구 25(2), 21-50.
- 이내영(2022) 한국 유권자의 정서적 양극화: 주요 원인과 비정치적 효과. 아세아연구 65(4), 5-36.
- 박현석(2023) 정치 양극화와 정당 민주주의: 국회의원 공천제도의 쟁점과 개혁방향. 글로벌정치연구 16(1): 83-103.
- 박현석·박상훈·윤광일·이재묵(2023) 정치 양극화의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23-12.
- 장승진·하상응(2022) 한국 유권자의 정당일체감: 사회적 정체성인가, 정치적 이해관계인가?. 한국정치학회보 56(2), 37-58.

이 자료는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www.nafi.re.kr) 및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